

美軍政時期(1945~1948) 中國國民黨 言論의 對韓認識*

- 『申報』를 中心으로 -

李 在 鈴**

국문초록

이 글은 終戰後 중국의 대표적 民營新聞으로 國民黨 인사들이 발행하던 『申報』의 한국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동아시아의 질서재편과정에서 중국의 對韓認識과 냉전형성기 韓·中 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戰後 『申報』에 보도된 한국기사는 美軍政의 점령정책 및 통치활동을 중심으로 국내정치세력의 반탁운동, 즉시독립과 통일독립의 대립, 공산당의 세력 확대 등에 관한 소식들로 채워졌다. 戰後 처리과정에서 중국은 美·蘇 주도의 국제협약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미국의 후원과 협력에 의해 제한적 역할만 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카이로회담에서 결정된 4개국 협약에 의한 한국독립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47년 말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반면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 현실적으로 한국과의 깊은 연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적극 간여할 수 없었다.

남북분단 및 미군정 3년의 평가와 관련하여 『申報』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후 미·소가 한국을 혼란 점령하지 않고 38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리적 분할지배가 정치체제의 분리로 이어졌고, 영구분단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분단의 원초적 책임이 미·소에 있으며, 한국은 냉전체제의 첫 희생물로 전락된 것으로 보았다. 물론 『申報』는 남한의 정치세력들이 신탁통치 여부와 건국방식을 놓고 좌우로 분열된 것도 분단의 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한국분단의 최종책임과 냉전체제의 원인제공은 미국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전후 유럽에서 공산세력이 크게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하여 냉전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식민지 한국을 패전국 독일과 동일시하여 미군의 점령지로 취급하였고, 미군정의 정책도 右偏向으로 친일파의 득세를 허용함으로써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방정국을 왜곡시켰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申報』가 미국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과 중국의 國共內戰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구축과 그에 따른 미국의 적극 개입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종전 이후 한반도에서 親中國의 통일독립정부 수립을 기대한 『申報』의 대한인식은 남북분단에 대한 동정이자, 자국의 암울한 내전상황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와중에 『申報』는 중국 스스로를 아시아의 '만형'으로 위치 짓고, 아시아의 신생국가들과 연합하여 평화와 번영을 보호한다는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 jrlee@dankook.ac.kr

동아시아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전후 『申報』의 對韓觀은 자국의 비관적 현실상황과 무관하게 전통적 중화주의에 기초한 우월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주제어] 申報, 中國國民黨, 美軍政, 韓·中關係, 韓國獨立, 信託統治, 美·蘇共同委員會, 冷戰體制, 南韓單獨政府.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
| II. 미·소 군정과 신탁통치방안 | V. 맺음말 |
| III.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처리 | |

I. 머리말

20세기 중반이후 한반도는 美·蘇에 의해 강요된 남북분단과 冷戰의 멍에를 짊어진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북한에 각각 들어선 美·蘇 軍政은 분단한국의 성격을 규정짓는 들머리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외형상 제국주의-식민시대는 끝났고, 뒤이어 등장한 냉전체제도 1990년대를 전후로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와해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식민지 잔재와 친일 역사의 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정치적 保革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냉전적 패러다임은 한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또 다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세계적으로 이미 끝장난 냉전의 상흔이 한국에서는 그대로 남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戰後 한국의 자화상이자 이웃한 중국의 현실이기도 한 분단시대 곧, 냉전체제에 관한 중국의 인식은 어떠했으며, 20세기 중반이후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무엇일까? 중국은 淸日戰爭으로 對朝鮮 관계에서 전통적 朝貢冊封에 의한 우월적 위계질서를 상실하고 일본의 대륙침략에 노출되었다. 일제강점기 韓·中 양국은 식민지와 반식민지 상태에서 항일독립투쟁을 통한 우호협력의 연대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한국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회담에서 한국독립을 국제적으로 처음 약속받았다. 그러나 終戰 이후 국공내전은 중국의 대외위상을 약화시켜 한국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역사적 연계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도의적 책임론을 거론하며 어떻게든 한국독립문제에 간여하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 미군정시기 중국의 대한 인식은 냉전체제 이후의 한·중 관계를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며, 지금까지도 양국관계와 상호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20세기 중반이후 한·중 관계의 올바른 인식은 미군정과 해방정국

에 관한 중국의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정 3년은 새로운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국내외의 여론수렴과 정통성 확보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 남한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렇게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주도권을 둘러싼 국내 정파의 세력다툼이 치열하였으며 남북분단에 의한 냉전체제가 고착화되었다. 지금까지 미군정시기 한·중 관계의 연구는 종전 이후 임정세력과 독립군, 그리고 在中韓人の 귀환문제 및 잔류세력의 처리에 집중되었다.¹⁾ 또한 남북한의 정부수립을 둘러싼 국내 정파의 갈등과 주변 국가들의 대응을 통해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정을 분석한 성과들이 있다.²⁾

이 시기 논쟁의 초점은 전후 한국독립에 관한 국제적 합의이행과정, 미·소 군대의 남북분할점령과 군정실시,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 대립, 미·소 공동위원회(약칭 미·소 공위)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 남북한의 정부수립 등으로, 이에 관한 중국의 현실인식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배제된 채 진행된 미·소 군정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통해 냉전형성기 한국문제에 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시작된 미·소 군정은 전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서막이자 현재까지 한·중 관계를 규제하는 기본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냉전체제 곧 남북분단의 배경을 민족 내부의 원인 [內因]과 외세에 의한 원인 [外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외세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상정한 外因論은 남북 분단이 미·소간의 권력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內因論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영향력이 당시 상황을 전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국내 정치세력의 좌우 대립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본다. 또한 복합론적 인식이 제기되었는데 내인과 외인 어느 한쪽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보자는 시각이다.³⁾ 이러한 남북분단의 배경에 관한 검토는 미군정과 불가분 관계에 있으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동시대 중국의 현실과 직결된 요인으로써 전후 동아시아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건이다.⁴⁾

이 글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국분단에 관한 중국의 현실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냉전 이후의 한·중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적 분열과 대립, 새로운 정부수립을 둘러싼 중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미군정의 성패와 역사적

1) 해방정국의 한·중관계사 연구로는 염인호, 「해방 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 확군운동」, 『역사문제연구』 1,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1996; _____, 「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동북지방 진출과 재중한국독립당의 정책(45. 8~47. 2)」, 『역사교육』 60, 서울: 역사교육연구회, 1996; 정병준, 「1945~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내 조직과 활동」, 『사학연구』 55·56 합집(신재홍정년논문집), 과천: 한국사학회, 1998; 이재령,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 - 『中央日報』·『新華日報』를 중심으로 -」, 『中國學報』 第56輯, 韓國中國學會, 2007. 12. 등이 있다.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 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건국60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 2008. 5. 16.

3) 이완범, 『한국해방 3년사』, 태학사, 2007. pp.15~16.

4) 이완범, 앞의 책, p.18.

의미 등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시대 중국의 대표적 민영신문으로 사실상 국민당에 의해 발행되고 있던 『申報』의 한국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상황과 표출된 여론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⁵⁾ 당시 국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申報』의 기사는 사실상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민당의 기관지인 『中央日報』와 공산당의 기관지인 『解放日報』 및 『新華日報』 등이 있었지만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반면 오랜 역사와 많은 부수로 영향력이 컸던 민영지 『申報』를 통해 본 남한의 미군정 3년은 전후 중국국민당의 한국인식을 이해하는데 유효할 것이다.⁶⁾

II. 미·소 군정과 신탁통치방안

1945년 9월 11일자 중국의 『申報』는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조선남부의 일본군 투항의식이 오늘 오후 조선총독부의 화려궁에서 거행되었다. …… 궁전 뒷대에서 일본국기가 내려지자 조선인민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 이후 미군은 거리에서 시가행진을 했다. 조선인민들은 거리 양쪽에 모여 서서 미군들을 환영했다. 이들의 손에는 중국·미국·영국·소련·조선 국기를 들고 흔들고 또 흔들었다.⁷⁾

36년 동안 식민통치를 해온 조선총독부 건물에 일장기를 대신하여 성조기가 휘날리고, 일본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연합국 4개국의 국기가 서울 거리를 뒤덮은 채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축하하며 미군정은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유럽은 소련의 치밀한 팽창전략에 의해 공산국가들로 속속 채워졌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패망이 점차 확실하게 되자 유럽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미국의 적극 개입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1945년 7월 25일 포츠담회담에서 북위 38도선을 분계선으로 한반도 분할이 확정되었다. 원래 38선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편의적 군사분계선이었으나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부 맥아더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에 근거하여 미·소 양군이 남북한을 분

5) 上海에서 발행된 『申報』는 1928년에 발행부수가 이미 14만 부에 이르는 중국 최대 규모의 민영 일간지로, 1934년 社主인 史量才가 反蔣 성향의 民權保障同盟에서 활동하던 중 국민당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이후 『申報』는 親國民黨 성격을 띠었으며, 中日戰爭 동안에 漢口, 홍콩, 上海 등지로 옮겨 다니며 停刊과 復刊을 반복했다. 1945년 말 國民黨의 潘公展과 陳訓愈가 6개월간 관리한 후 1946년부터 정부 소유로 바뀌었고, 1949년 5월 27일 『申報』는 紙齡 第 25599號를 마지막으로 終刊되었다. 宋軍, 『申報의興衰』,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pp.230~237.

6) 이 시기 중국신문은 기사의 취재와 보도, 신문배포 등의 제반 언론활동이 국민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신문마다 기사내용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특정사안의 보도 횟수와 신문지면의 편집방향, 社論 및 기획보도 등을 통해 개별 언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7) 「朝鮮華麗宮中日軍簽降書」, 『申報』(1945. 9. 11).

할 점령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의 서막을 알렸다.⁸⁾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군정이 실시되는 동안 중국의 내부 상황은 급변하였다. 일본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국민당과 공산당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 되었고 終戰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중국의 사회경제는 혼란스러웠다. 이 시기에 『申報』·『大公報』 등 중국의 주요 민영신문들이 復刊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오래 동안 주중관계를 맺어왔고 항일투쟁을 통해 우호협력을 유지해 온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예의주시하였다.

戰後 중국 국민당정부는 한반도에서 미·소의 분할지배를 반대하고 연합국 4개국의 공동협약에 의한 통일독립국가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1943년 카이로회담부터 얄타, 포츠담으로 이어진 戰時會議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실무회의가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미·영·소 3국의 외무장관들이 참여하였고,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미국은 본격적인 신탁통치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미·소 양군 사령관을 우두머리로 하는 단일정부를 제안하였다. 소련은 조선민중의 공통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시 조선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는 것과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긴급과제라고 주장하였다.⁹⁾

그 뒤에 미국이 제시한 방안은 인위적으로 그어진 분계선을 취소하고 한국사회의 안정과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미·영·소·중 4개국이 공동으로 5년간 신탁관리를 하되 그 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¹⁰⁾ 아울러 카이로선언에 근거하여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인이 스스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모하자고 주장하였다.¹¹⁾ 소련은 신탁통치기간에도 임시조선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4개국은 단지 후견적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분할점령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 신탁통치를 실시하되 유엔이 주도하는 방안을 조약하게나마 결정해 놓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 임하였다.¹³⁾ 반면 소련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던 對韓政策인 다자간 국제신탁통치가 미국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판단하였고, 중국 국민당정부의 한국문제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독자적인 대한구상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신탁통치 구도 속에서 자국의 입지를 상실하지 않겠다는 결론만을 갖고 있었다.¹⁴⁾ 이 회의에서 한국문제는 논란 끝에 미·영·소·중 4개국이 5년간 제한적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한국의 자유·독립을 희망해 왔다면, “신탁통치기간을 확실히 정하면 한국의 완전한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8) 한정일, 「분단과 민군정」, 이수인 엮음, 『한국현대정치사 1 - 미군점령시대의 정치사』, 실천문화사, 1989, pp.26~27.

9) 이동현, 『한국신탁통치연구』, 평민사, 1990, pp.41~42.

10) 「朝鮮問題列入議程」, 『申報』(1945. 12. 24).

11) 「美·蘇商討韓國問題」, 『申報』(1945. 12. 28).

12) 조순승, 『한국분단사』, 형성사, 1982.

13) 이완범, 앞의 책, p.49.

14) 정병준, 「동서냉전체제와 한국전쟁 - 한국 분단체제·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중심으로 -」,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7, p.479.

의사를 표시하였다.¹⁵⁾ 또한 본국과 직접 관련된 동북지역에 대한 주권보장과 중국의 평화통일을 강조하면서 5년의 신탁통치기간 동안 미·소 군정이 지속되는 것에 반대하였다.¹⁶⁾ 중국은 전후 한국독립에 있어서 자국까지 포함된 4개국 신탁통치방안을 찬성하였지만 미·소의 독점적 분할지배를 반대하는 자기중심적 이중 태도를 취한 것이다.

연합국 4개국의 신탁통치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이 한국 신문에 왜곡되어 알려지면서 남한에서 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¹⁷⁾ 당시 한국사회의 내부는 공산주의자로 대표되는 좌익과 반공산주의자로 대표되는 우익, 그리고 연립내각을 모색한 중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 세 세력은 반탁운동을 계기로 하나로 일치 되었는데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치세력은 임정이었다. 이에 대해 미군정의 최고책임자 하지중장은 신탁통치를 즉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5년간 감독’이란 곧 한국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소의 전리품으로 전략했음을 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탁운동과 관련하여 『申報』은 일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스크바 결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¹⁸⁾ 종전 직후 중국은 군사·외교 및 재정·경제의 역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국의 기본이익을 지키며 한국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책이란 託治國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독자적으로 한국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4개국의 신탁통치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선책이고 이런 토대 위에 親中 성향의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다.¹⁹⁾ 이 때문에 중국 신문들은 한국의 신탁통치방안을 다른 모스크바 3상회의의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한국에서 반탁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소 양국은 외형상 신탁통치를 추진했지만 내부적으로 자기 점령지역에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몰두하였다.²⁰⁾ 특히 미국은 전후 동유럽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반도의 공산화에 단호히 대응하였다. 예컨대 한국에서 대의제 임시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군을 남한에 계속 주둔시키고,²¹⁾ 자치정부가 수립되더라도 별도의 고문단을 조직하여 계속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²²⁾

이즈음 중국 언론은 반탁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남한 정치세력들의 분파활동과 시국동향에 주의를 기울였다. 무엇보다 신탁통치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좌우 갈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

15) 「我國政府發言人談三強會議託管韓國實有助於獨立」, 『申報』(1945. 12. 30).

16) 「韓人反對託治制度」, 『申報』(1945. 12. 30).

17)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는 미국 AP통신으로부터 전해 받은 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일정기간동안 신탁통치가 실시될 수도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원했지만 소련이 한국에서의 신탁통치를 고집했다면서 모스크바 회담의 결과 내용을 왜곡 보도하였다. 『東亞日報』(1945. 12. 27).

18) 「韓國人羣憤激反對託管制度」, 『申報』(1945. 12. 31).

19) 李在鎔, 「20세기 중반 韓中關係의 이해 - 韓國獨立에 관한 中華意識의 二重性 -」, 『中國近現代史研究』第29輯, 韓國中國近現代史學會, 2006, pp.101~102.

20) 「美擬單獨進行建朝鮮政府」, 『申報』(1946. 7. 7).

21) 「韓共攫取政權美國表示反對」, 『申報』(1946. 9. 1).

22) 「韓國自治政府明年三月成立」, 『申報』(1946. 9. 24).

다.²³⁾ 반탁운동을 주도한 李承晩과 金九는 정치노선과 활동방향이 서로 달랐다. 李承晩은 유엔과 미국에 대한 직접 외교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절차에 의한 독립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²⁴⁾ 우익세력들은 중국·미국의 도움으로 유엔총회에서 한국독립을 호소하였는데 이승만이 중국의 유엔수석대표인 顧維鈞으로 하여금 한국문제를 거론해주도록 蔣介石에게 협조편지를 보냈다.²⁵⁾ 그뿐 아니라 이승만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만약 한국인이 스스로 정부를 조직하지 못하면 공산당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反共을 명분으로 조속한 독립 허용을 촉구하였다.²⁶⁾ 이승만의 渡美활동은 겉으로 반공을 위해 남한의 자체무장과 군사훈련에 필요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려는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중심으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대미활동을 마친 이승만은 귀국길에 중국으로 건너가 蔣介石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과 접촉하였다. 여기에서 이승만은 “남한 내 임시정부의 수립, 소련군의 철수협약, 남북한의 통일정부 수립”이란 자신의 독립방안을 미국이 지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중국방문이 한·중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강화를 위한 것으로, 독립운동과정에서 중국이 제공해준 여러 가지 지원 및 임정과와의 협력에 깊이 감사하였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金九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누차 강조하면서, 공산당과 대치중인 중국 내부 상황을 동정하고 반공연대의 가능성을 적극 피력하였다.²⁷⁾ 이에 대해 蔣介石은 “중·한 양국은 형제처럼 지내는 인접국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의 독립정부수립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였다.²⁸⁾

이승만의 중국방문에 맞추어 『申報』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양국관계를 소개하고, 카이로회담에서의 중국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런 연장선에서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미·소 군정이 민족자주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통일독립을 무기한 연장시키며, 미·소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남북한의 대결구도는 중국 동북지역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극동의 평화에도 저해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미·소 주도의 분할지배는 한국과 동아시아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지역의 분열과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인식이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원조하는 것이 천직으로, 현재 한국의 처지에 동정을 표시하고 미·소 주도의 군정통치에 반대하였다.²⁹⁾ 전후 중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했지만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후 동북지역에서 소련군의 영향이 급속히 증대되자 미·소 군정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냈다.

국공내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던 시기에 인접한 북한지역에서 공산세력이 커지는 것은 중국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申報』의 주요 관심사가 남한에서 미군정의 실태

23) 「韓慶祝獨立紀念 左右派發生衝突」, 『申報』(1947. 3. 3).

24) 「李承晩在美爲韓獨立呼吁」, 『申報』(1947. 3. 6).

25) 「南韓代表致蔣主席在聯大主持正義」, 『申報』(1946. 11. 4).

26) 「李承晩主張韓南獨實行武裝」, 『申報』(1947. 2. 26).

27) 「韓國必須獲得獨立－歡迎李承晩博士來華(社論)」, 『申報』(1947. 4. 10).

28) 「李承晩晉謁主席代表韓人民致敬」, 『申報』(1947. 4. 14).

29) 「韓國必須獲得獨立－歡迎李承晩博士來華(社論)」, 『申報』(1947. 4. 10).

및 정부수립의 방향은 물론 북한지역의 군비증강과 공산정권의 수립, 경제상황 등으로 다각화 되었다.³⁰⁾ 이 가운데 뉴스의 초점은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였고, 특히 미국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申報』는 사실을 통해 “중국인민은 三韓의 인민들과 손발처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국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고, 중국과 한국은 “이와 입술의 관계”로, 중국인민은 한국의 통일독립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런 관점에서 전후 한국문제를 주도한 미국의 對韓政策이 소극적이며 방임적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남한 내에서 좌우대립이 격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남한의 정치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각성이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협력정신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³¹⁾

이렇듯 『申報』는 미·소에 의해 주도된 전후 남북한의 분할점령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카이로협정을 위반한 미·소 양국의 독점적 한국지배와 군정 실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남한의 정치세력이 신탁과 반탁을 빌미로 분열되어 좌우대립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못 마땅히 여겼다. 이러한 비관적 현실인식은 남북분단으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동정이자 국공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자국의 암울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Ⅲ.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처리

종전 직후 한국독립과 관련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1차 미·소 공위가 1946년 3월에 소집되었다. 이 무렵 미국은 내부적으로 신탁통치 방안을 폐기한 상태로, 외형상 남한에서의 격렬한 반탁운동을 그 빌미로 삼았다. 말하자면 미·소 공위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은 이미 실패를 예견한 것이다. 무엇보다 미·소 공위의 협의대상이 될 한국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해 미·소의 의견차가 너무 컸다.³²⁾

미·소 공위의 참여문제로 남한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는데 『申報』는 이런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우파를 대표한 이승만은 미·소 공위의 구성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신탁통치제도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하지중장이 “이승만은 국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함으로써 형식상 미·소 공위에 참여할 뿐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모색하고 있던 미국의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³³⁾ 單政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승만은 정부수립방안과 관

30) 「組織韓國政府麥師表示贊助」, 『申報』(1947. 4. 14).

31) 「朝鮮國勢顯露陽光(社論)」, 『申報』(1947. 4. 15).

32) 김영명, 「남한의 정치적 동태와 미군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I』, 오름, 1998, pp.88~89.

련하여 “한국은 오직 하나의 출로 밖에 없다. 한국은 100% 민주정부를 건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나치와 같은 공산당정권이 건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의 공산당이라도 참가한 혼합정부의 결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미군정의 유화정책을 비난하고 철저한 반공노선을 강조하였다.³⁴⁾

1차 미·소 공위의 실패 후 미군정은 남한에서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했다. 1946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좌우합작위원회와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들인 김구식·여운형·안재홍·홍명희 등은 미·소 공위의 참가에 긍정적이었다.³⁵⁾ 그러나 임정세력을 주축으로 조직된 한국독립당은 미·소 공위의 참가여부로 내부 분열이 심각하였다. 임정 원로파의 대표격인 김구는 미·소 공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이미 발표했고, 혁신파와 민주파가 참가를 주장하자 두 파의 책임자인 안재홍 등 35명을 제명시켰다.³⁶⁾ 이 때문에 김구는 미군정의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³⁷⁾ 미군정의 좌우합작운동 지원에 숨은 의도는 모스크바 합의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세력과 조선공산당처럼 명확한 사회주의자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좌우합작운동을 후원하던 미군정은 조선공산당 탄압을 강화했고, 반탁운동에 대한 핍박도 한층 거세게 몰아쳤다.³⁸⁾

중국에서 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김구는 국민당정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終戰 이후로도 중국의 언론과 주요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지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이승만이 訪中하자 蔣介石 내외를 비롯한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김구와의 협력을 노골적으로 촉구할 정도였다.³⁹⁾ 그러나 남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미군정은 임정의 실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해방이후 임정인사들의 귀국도 개인자격으로 허용하였을 뿐이었다. 점령군의 성격을 띤 미군은 남한에서 어떤 종류의 임시정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럼에도 김구가 전국적인 반탁운동을 통해 임정의 권능을 주장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하려하자 미군정이 강력히 대응하였다.⁴⁰⁾

우여곡절 끝에 열린 2차 미·소 공위는 남한의 주요 정당대표들로 안재홍·여운형·장덕수·박헌영 등이 참석했고, 이승만·김구는 불참하였다.⁴¹⁾ 이후 미·소 군정은 남북한의 반탁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소련군에 의해 반탁 시위자들이 살해되거나 부상당하였다.⁴²⁾ 남한의 13도 대표들은 연명으로 미군정에 협력할 것을 보증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신탁통치를 줄곧 반대한 이유로 독립원칙에 어긋나는 점도 있지만 신탁통치가 실시되면 공산당의 확대를 막지 못할 것이란

33) 「李承晚否認與美有秘密協定」, 『申報』(1947. 5. 26).

34) 「美對韓共黨姑息政策 李承晚深表不滿」, 『申報』(1947. 6. 17).

35) 「南韓黨表示願與美方協商」, 『申報』(1947. 6. 21).

36) 「韓國獨立黨分裂 革新派安在鴻等被開除」, 『申報』(1947. 6. 22).

37) 「美高級當局不滿金九言行」, 『申報』(1947. 6. 24).

38)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엮음, 최덕수 옮김, 『끝나지 않은 20세기 - 동아시아역사 1894~』, 서울: 역사비평사, 2008, p.114.

39) 蔣介石總統의 부인 송미령까지 이승만에게 김구의 안부를 물으면 공동협력을 당부하였다. 「李承晚晉謁主席代表韓人民致敬」, 『申報』(1947. 4. 14).

40) 「金九籌組韓國臨時政府 勒琪發表聲明認為不合」, 『申報』(1947. 5. 13).

41) 「南韓會議昨揭幕四百政黨社團參加協商」, 『申報』(1947. 6. 26).

42) 「韓北反託管示威多人被逮捕」, 『申報』(1947. 7. 23).

냉전논리를 폈다.⁴³⁾ 남한의 우파세력은 미국에 대해 자신들의 반탁운동이 反美가 아닌 反共을 위한 활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친미반공노선을 명확히 들어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친일세력까지 반공이데올로기와 친미노선을 무기삼아 미군정체제 아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재생, 유지, 확대시켜나갔다.

남한에서 신탁통치의 찬반여부로 좌우대립이 격렬해지면서 폭력사태가 빈번하였다.⁴⁴⁾ 급기야 해방정국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呂運亨이 피살당하였다.⁴⁵⁾ 건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남한 정치세력의 대립이 반탁운동을 거치며 좌우파의 대결로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다. 남한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임정세력을 이끈 김구로, '신탁통치 반대'라는 국민감정을 이용하여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고양시켰다. 반면 이승만은 한국민주당과 더불어 반탁노선에 동조하였으나 미군정에 대한 직접적 저항은 기피하였다. 그는 반탁운동 때문에 미국과 마찰하는 것은 득이 없다고 보았다. 애당초 그는 미·소 합의에 의한 남북통일이나 좌우연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자신을 정점으로 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추진하였다.⁴⁶⁾

김구의 반탁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미군이 장악하고 있던 남한지역의 정치구도에서 민족적 열정과 통일독립의 명분 이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수단을 갖지 못한 김구의 정치노선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반탁운동은 좌우대립만 심화시키고 우파의 단정 수립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⁴⁷⁾ 그런데 『申報』는 반탁운동으로 인한 남한의 좌우대립보다 미·소의 분할 지배에 의한 남북한의 폐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트루먼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아시아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 워드마이어와 중국주재 한국임시정부대표단 단장 박찬익의 면담기사에 잘 드러나 있다.

『申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에 의해 투쟁과 파괴, 무력이 횡행하여 끝없는 공포와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활동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남한에서는 공개적인 당파활동이 가능하지만 다년간 독립운동에 헌신한 혁명단체와 개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군정하에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것은 매판계급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영어 몇 마디 안다고 미군의 뜻에 따라 동포들을 억압하고 있어, 백성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한국의 해방은 “한 주인 [일본]이 바뀌어 다른 주인 [미국]이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였다.⁴⁸⁾ 그동안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임정세력과 김구의 위상은 철저히 부인하면서 친일세력의 득세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미군정의 점령정책을 꼬집은 것이다.

43) 「朝鮮十三省人民表示願與美眞誠合作」, 『申報』(1947. 7. 19).

44) 「韓政黨領袖被狙擊殞命」, 『申報』(1947. 7. 20).

45) 「霍奇對呂運亨之死表示痛心」, 『申報』(1947. 7. 24).

46) 김영명, 앞의 글, pp.85~86.

47) 김영명, 앞의 글, p.84.

48) 「魏德邁東來途中訪韓國臨時政府駐華代表團長朴純」, 『申報』(1947. 7. 23).

또한 그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합의된 신탁관리방안이란 아무런 역사적 근거가 없이 그저 자신들의 세력균형을 위한 것으로, 이 때문에 한국만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남북한을 나눈 38선이 두 사상과 제도의 분계선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모순의 최전선이라고 내다보았다. 더 나아가 전후 한반도에서 38선을 경계로 형성된 냉전체제가 한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의 평화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⁹⁾ 따라서 그는 국공내전과 한반도 분단으로 야기된 동아시아지역의 좌우대립이 사실상 공산당과 연계된 국제문제로, 그 해결의 열쇠란 한국에서 조속히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국공내전이 악화되는 가운데 『申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한국 관련기사는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공산당문제에 집중되었다. 대부분 美國發 기사를 인용 보도하였는데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의 형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였다. 예컨대 미국 공화당 쉐부르 의원은 “소련이 무력, 유혹, 유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조선을 공산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소 점령지의 분계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지역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⁵⁰⁾ 특히 미국기자들의 아시아 르포에서는 남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세력의 불법폭력을 부각시켰다. 그들은 “분열되어 있는 세계의 두 사상체제가 조선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그 첨예한 대립을 어느 나라와도 비길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분단을 냉전체제의 첫 번째 희생물로 파악하였다.⁵¹⁾

이처럼 미국 언론은 전후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산세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申報』 등의 중국 언론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여 냉전체제를 부추기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미국 언론은 소련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북한지역의 무장화가 그 이전 발칸반도에서 취한 소련의 조치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욱이 중국 동북지역의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군대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훈련방식을 전수받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⁵²⁾

시카고 신문의 소련특파원 헐츠는 만일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하고, 동시에 소련도 북한에서 철수하게 되면, 결국 북한 공산당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를 점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시카고 논단의 심슨기자는 소련의 아시아 지배전략을 보도하면서 북한은 이미 철저히 공산화되었고, 장차 동북지역까지 합병시켜 동북아시아의 시베리아·쿠릴열도·치시마(千島) 및 外蒙古를 하나의 대집단으로 묶은 후, 內蒙古와 新疆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면 이들 지역까지도 대집단에 포함시킬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므로 미국이 남한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공산화될 것이고, 일본도 소련에 합병되어 결국 중국을 포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³⁾ 이처럼 중국 언론을 통해 투영된 미국 언론의 對韓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애당초 미·소 공위의 실패를 예상하고 통일독립국가의 수립보다 남한지역의 안정적 항구적 지배력 확보에 더 치중하였다.

49) 앞의 글, 『申報』(1947. 7. 23).

50) 「韓國組臨時政府 美軍司令霍奇表反對」, 『申報』(1947. 3. 6).

51) 「南韓共黨醞釀革命 漢城人心極度不安」, 『申報』(1947. 7. 31).

52) 「韓共野心益形露骨」, 『申報』(1947. 8. 22).

53) 「蘇聯統治亞洲計劃(美記者之報道)」, 『申報』(1947. 8. 23).

『申報』는 미·소 주둔군의 한반도 분할점령을 유럽의 미·영·프·소 4개국이 독일에 주둔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였고, 전후 유럽에서 시작된 미·소 주도의 세력대결이 극동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남한단독정부 수립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냉전구도를 재촉시킨 요인으로 남북한 정치세력들의 좌우 대립을 들고 있다.⁵⁴⁾ 그렇지만 남북 분단의 일차 책임이 미국과 소련에 있다고 보았는데 일본의 식민통치를 40여 년 동안이나 받아온 한국은 전후처리 준비회담에서 4개국으로부터 이미 독립을 보장받아 패전국 독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할 점령한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申報』는 미·소 양국이 서로 난국타개의 성의가 있다면 중국·영국과 함께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회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⁵⁵⁾ 아무런 성과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미·소 공위를 대신하여 카이로회담의 기본원칙으로 되돌아가 4개국이 공동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주장이었다. 이것은 한국문제를 미·소의 독점지배로부터 4개국의 다자간 협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내전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마침내 미국정부는 중국·영국·소련에 대해 워싱턴에서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제의했고, 중국정부는 즉각 찬성을 표시하였다.⁵⁶⁾ 미국 국무부 장관 로버트가 소련의 외교부장 몰로토프에게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의 점령지역에서 가능한 빨리 선거를 실시하여 대표성을 갖는 임시의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의해 선출하며, 4개국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치·경제의 기초를 세우자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수립된 임시정부가 4개국 연합국과 함께 한국에 주둔중인 미·소 군대를 일률적으로 철수시키는 시기를 확정하도록 계획했다.⁵⁷⁾

당시 미국의 한국문제 유엔이관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전후 한국독립과 관련하여 미·소 양자 협의도 어려운 현실에서 4개국 협상은 더욱 곤란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4개국 협상안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을 내심 결정한 미국이 예비단계로 내놓은 형식적 외교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⁵⁸⁾ 미국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미·소 공위를 대신하여 4개 강대국 회의를 먼저 제안했지만 궁극적으로 유엔에서의 처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공산당과 내전 중이던 중국정부는 미국의 경제·군사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미국 역시 전후 냉전질서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해야 했고, 이를 위해 중국과의 연대가 필수적이었다. 동아시아의 냉전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강조되었

54) 일반적으로 국내의 좌우대립이 한반도에서의 미·소 대립에 영향을 미쳐 냉전이 본격 출현한 1947년보다 앞선 1946년 초부터 미·소 대결 구도가 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완범, 앞의 책, p.163.) 세계에서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947년 3월 12일 유럽에서 냉전을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이 선포된 이후이다.(같은 책, p.176.)

55) 「潘世憲：漢城會議展望」, 『申報』(1947. 8. 22).

56) 「四強會商韓政局 我政府同意參加」, 『申報』(1947. 8. 31).

57) 「樹立韓蘇臨時政府美聯提出具體意見」, 『申報』(1947. 8. 31).

58) 「朝鮮問題我決參加討論」, 『申報』(1947. 9. 2).

고, 한국독립문제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유엔에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한 후 한국정세를 조사하고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일정부의 조직방법과 기초로 삼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유엔과 한국임시정부가 협의하여 미·소 군대의 철수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소 공위의 소련대표단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는데 “미국은 이것저것 트집이 많고 조선의 정당들과 협상하여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문제에 소련의 건의를 거절하였다”면서 사실상 미국이 한국문제를 난항에 빠뜨렸다고 비난하였다.⁵⁹⁾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중국은 유엔대표 顧維鈞를 통해 한국문제의 유엔처리에 즉각 동의하였고,⁶⁰⁾ 영국도 원칙상 찬성하였다. 顧維鈞는 한국독립의 기본원칙으로 중국이 참여한 카이로회담의 합의사항을 내세우며 후견 역할과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엔 방안에 다자간 신탁관리계획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를 관철시키려면 중국이 직접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미국의 거부로 실패하였다.⁶¹⁾ 이로서 신탁통치에 의한 한국독립의 참여를 줄곧 염두에 둔 중국의 전후 한반도정책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한편 미국이 제기한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에 맞서 소련은 미·소 점령군을 이듬해 봄까지 한반도에서 철수시키자는 ‘동시 철군론’을 내놓았다.⁶²⁾ 이에 대해 이승만이 곧바로 반대하였고 오히려, “미국은 남한에 소수 군대를 남겨두어 치안을 유지하는데 협조하고, 주권독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미군의 ‘계속 주둔’을 주장하였다.⁶³⁾ 한반도의 군사력 동향에 가장 예민했던 중국은 외교부장 王世杰의 성명을 통해 미·소 주둔군의 철수는 유엔과 모스크바협정에 참여한 4개국이 공동 결정할 문제라면서, 소련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였다. 그렇지만 군대철수 이후 한국에서 무정부상태나 내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만약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미·소 군대의 철수시기와 조건을 함께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모스크바협정 4개국과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⁶⁴⁾

동시철군과 관련하여 유엔 중국대표 顧維鈞이 밝힌 전제조건은 임시민주정부의 수립, 법과 질서의 수호, 내전의 위험요소 제거 등이었다. 또한 중국은 유엔에서 규정한 어떤 조건이라도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우선 4개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⁵⁾ 공산세력에게 내몰리고 있던 중국 국민당정부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깨뜨릴 소련의 동시철군을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미 공산화된 북한지역은 물론 좌우대립으로 혼란스러운 남한에서도 미군 철수란 곧 힘의 공백을 의미했다. 종전 후 동북지역을 장악한 중국공산당이 소련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59) 「美國將朝鮮問題正式提交聯大會」, 『申報』(1947. 9. 19).

60) 「我代表團闡述贊成美國建議理由 但保留對韓獨立主張」, 『申報』(1947. 9. 23).

61) 「美對朝鮮問題新建議 中英表示原則贊同」, 『申報』(1947. 10. 13).

62) 「促成韓政治獨立應由聯合國監視」, 『申報』(1947. 9. 29).

63) 「李承晚要求蘇聯軍立即無條件撤軍 但主張美軍應留置南韓」, 『申報』(1947. 10. 1).

64) 「王外長發表聲明韓國應早予獨立」, 『申報』(1947. 10. 21).

65) 「顧維鈞在聯大政會演說朝鮮應早獲獨立」, 『申報』(1947. 10. 30).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소련군의 동시철수를 의심하였고, 한국독립이 완료된 이후 미군철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 후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소 군대의 철수 시기와 방법, 사전조치 등을 모스크바협정의 4개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⁶⁶⁾ 예컨대 顧維鈞은 “조선 점령군의 철수관련 조치나 방법에 관하여 중국의 발언권이 있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요구했다.⁶⁷⁾ 그런 근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은 중국의 동북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申報』도 역사적으로 오래 동안 지속된 연대와 지리적 인접성을 배경으로 한·중 양국을 ‘唇亡齒寒’의 관계로 이해하였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인 『申報』은 공산당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기사를 쏟아냈다. 예컨대 미국의 Collier's 주간 발행인 W.L. Chenery가 쓴 「조선의 교착상태」란 기사를 전재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미국)가 할 일은 공산주의가 세계 각지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조선에서 철수하더라도 소련의 새로운 야심을 실현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선에서 철수할 것이다. …… 우리는 극동과 태평양지구에서 어떤 방어능력을 건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장래와 조선에서 우리가 얼마동안 주둔할 것인가의 문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 전후 미국의 역할은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미·소 양국의 냉전적 대결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⁶⁸⁾ 이 때문에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여부는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고려보다 냉전체제 아래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였다. 특히 미·소 주도의 이데올로기 대결양상이 한국분단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있어서 카이로회담의 성과물인 4개국 협의에 의한 독립과 미·소 군대의 철수를 주장했지만 스스로 실행력이 없는 국제적 합의란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다. 냉전의 시발점인 한국분단과정에서 중국은 주도적 계획이나 자주적 역량이 아닌 미국의 협력자로서 제한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남한의 단독정부의 수립

1947년 10월말 마침내 유엔의 57개국 정치위원회는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41대 0표로 미국의 한

66) 「韓國問題我贊同美·蘇同時撤兵」, 『申報』(1947. 11. 2).

67) 「我聲名對韓境駐軍措施應有發言權」, 『申報』(1947. 11. 6).

68) 「朝鮮僵局」, 『申報』(1947. 11. 17).

국독립 방안을 통과시켰다.⁶⁹⁾ 곧이어 중국과 필리핀 및 인도에서 수정한 한국독립방안을 최종 확정 지었다.⁷⁰⁾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에 파견할 임시위원단을 중국·인도·시리아·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필리핀·엘살바도르의 9개국 대표로 구성하고, 중국대표 胡世澤을 총책임자로 삼았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한국 현지에서 독립절차를 지도 감독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내년 3월 31일 이전까지 선거를 거행한다.

둘째, 선거후 즉시 국민회의를 소집하여 국민정부를 조직한다.

셋째, 국민정부는 국군을 조직하며 국군 범위에 속하지 않은 모든 군부대는 해산시킨다.

넷째, 미·소 점령국과 협의하여 가능한 국민정부가 성립한지 90일 이내에 미·소 양군이 한 국에서 철수하도록 한다.⁷¹⁾

1947년 말 미국에 의해 제출된 한국독립방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후 미·소 공위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이로부터 중국의 관심사는 남북한의 정국을 누가 혹은 어떤 세력이 주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부수립을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미국의 역할과 국내 정치세력들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우파세력은 남한에서만 단독으로 치르게 될 단독선거를 전국적인 투표로 인정해 줄 것을 유엔에 촉구하면서 남한에서 하루빨리 공화국을 건립하는 것이 통일의 관건이란 주장을 폈다.⁷²⁾ 여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승만은 『申報』와의 회견에서 “만일 남한이 무기를 획득할 수 있다면 6주일 내에 50만 명의 군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 무력으로 북한공산당과 작전할 수 있다. …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은 오직 무기뿐이다. 미국무기로 남한군대가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피력하였다.⁷³⁾ 그의 주장은 먼저 남한에서 독립 국가를 세운 후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북한 지역을 통일하자는 것으로, 냉전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친미반공노선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

중간파는 정당들의 지나친 난립으로 계속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김규식·홍명희·이극로 등 백여 명이 참여하여 민족자주연맹을 조직하였다.⁷⁴⁾ 온건 우파를 비롯한 대다수 정치세력들은 남한만의 정부 수립에 부정적이었다. 한국임시정부 주중대표단의 대변인 민석린은 “한국민은 누구나 통일정부의 출현을 갈망해왔다. 이런 갈망은 서

69) 「朝鮮問題聯大政委會通過美修正案 我代表支持美國立場」, 『申報』(1947. 11. 1), 유엔에 있어서 한국 문제의 실질적 토의는 10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유엔총회의 1분과위원회인 정치위원회에서 델레스 미국대표가 미국측안을, 그로 미코 소련대표가 소련의 방안을 설명하였다. 천관우, 『자료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7, pp. 354~55.

70) 「朝鮮獨立案全文」, 『申報』(1947. 11. 7).

71) 「聯大通過朝鮮獨立案成立九國委員會」, 『申報』(1947. 11. 16).

72) 「韓人陳述對選舉意見」, 『申報』(1948. 1. 29).

73) 「李承晚談話韓人盼能獲得武器以與北韓共黨作戰」, 『申報』(1948. 1. 30).

74) 「朝鮮中間派政黨組民族自主聯盟」, 『申報』(1947. 10. 2).

로 의견이 다른 외세가 점령한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소련이 점령한 북한은 기근에 빠져있고, 미군정은 남한의 친일 우익들만 기용하여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한국인은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떤 외부세력이 계속 간섭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⁷⁵⁾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관하여 중국정부는 유엔결의와 모스크바협정을 위반하고 건립된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원칙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독립이 동아시아의 안전과 깊은 관계에 있다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였다.⁷⁶⁾ 마침내 유엔 소위원회에서는 31대 2, 기권 11표로 미국이 제안한 남한만의 선거결의안을 통과시켰다.⁷⁷⁾

1948년 5월 10일로 예정된 남한의 총선거에 이승만과 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좌우파 불문하고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3월 21일, 22일 이틀간 서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단독선거를 찬성한 사람은 5%에 불과했고, 남북한 정치협상에 대해서 71%가 지지하였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망을 보도하였다.⁷⁸⁾

남한에서 총선거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제안으로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약칭 연석회의)가 소집되었다. 『申報』은 연석회의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남한 정당들의 참가 여부와 남북한 정파의 협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申報』은 반탁운동과 미·소 공위의 참여논란, 그리고 남한단독선거까지 계속된 좌우대립의 배경이 미·소의 분할점령에 있지만 국내정치세력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남한의 정파들이 일치단결하여 5·10선거를 거부한다면 소련도 북한정권을 수립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석회의가 미국과 소련의 질곡으로부터 한국이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좌우파의 연대에 큰 기대를 걸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미·소는 한반도에서 주둔군을 철수시키고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남한의 김구와 김규식이 참석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이들의 평양행을 저지하지 않았지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대표를 맡고 있던 胡世澤이 연석회의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하며 5월 10일 남한의 총선거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남한정국과 관련하여 이승만과 김성수의 다수파가 남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⁸⁰⁾ 그는 한국의 신속한 통일독립을 기대하지만 공산당의 지배는 원치 않는다면서 반공노선을 명확히 밝혔고, 결국 투표율이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75) 「我對韓國獨立主張 外部將發表聲名」, 『申報』(1948. 2. 18).

76) 「外部時司長發表談話 違反協定所建政府我不予考慮」, 『申報』(1948. 2. 19).

77) 「小型大會通過決議案 南韓決進行選舉」, 『申報』(1948. 2. 28).

78) 「南韓各政黨反對單獨選舉」, 『申報』(1948. 3. 29).

79) 「韓國南北分合의 關頭(社論)」, 『申報』(1948. 4. 7).

80) 「胡世澤在平談南北韓需統一」, 『申報』(1948. 4. 24).

예상하였다.⁸¹⁾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김구와 김규식이 5월 4일 남한으로 귀환했다. 그들은 연석회의에서 통과된 건국계획을 지지하였는데 우선 미·소 점령군을 철수시킨 후 전국적인 선거로 제헌회의를 구성하여 정치체제를 결정하자는 내용이었다.⁸²⁾ 이에 대해 미국은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공산당군대가 남한을 통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은 소련 위성국의 하나로 변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미·소 공위의 결렬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은 남북통일정부가 아닌 남한단독정부의 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총선거를 통한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세력의 집권을 도모하였다.

5월 10일 실시될 남한선거의 성격에 대해 『申報』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막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곧 냉전체제의 서막으로, 미군정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⁸³⁾ 왜냐하면 전후 미·소의 분할점령이 통일독립과 국가변영을 갈구하던 한국인들의 소망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일본 부흥정책이나 미군정 아래서 친일세력의 득세는 남한주민들의 반미반일의를 조성하여 폭동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남한 총선거는 의외의 파동을 일으켜 ‘동방의 화약고’를 폭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⁸⁴⁾

이렇듯 혼란과 우려가 교차한 가운데 남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전체 유권자 8백여만 명 중 85% 내외가 투표에 참가하였고, 진행도 순조로워 미군정의 하지중장과 이승만은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申報』는 이후의 한국정세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전후 미·소가 한반도에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거국면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장차 역사상 볼 수 없던 내전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⁸⁵⁾ 남북분열로 두 정부가 출현하게 되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하여 동아시아의 앞날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남한 총선거가 끝나자 『申報』의 한국 관련보도는 단독정부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처음으로 소집된 제헌의회 보도에서 ‘고령인 74살에 반공정치영도자 이승만’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고,⁸⁶⁾ 대한민국 헌법초안이 중국헌법을 참고하였음을 밝혔다.⁸⁷⁾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申報』는 “조선의 비극은 이미 결정되었다. 조선의 분열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극동의 위기이며, 황해시대의 거대한 파도”라고 하여 동아시아의 앞날을 우려했다.⁸⁸⁾

81) 「胡世澤分析朝鮮全般局勢」, 『申報』(1948. 5. 3).

82) 「金九奎奎擁護北韓決議」, 『申報』(1948. 5. 7).

83) 「南韓選舉期近幕後競爭益烈」, 『申報』(1948. 5. 5).

84) 「正視朝鮮的危局(社論)」, 『申報』(1948. 5. 7).

85) 「南韓普選以後的朝鮮政局(社論)」, 『申報』(1948. 5. 19).

86) 「制定憲法組織民主政府朝鮮國會行開幕禮」, 『申報』(1948. 6. 1).

87) 「韓國將改稱‘大韓民國’憲法草案一讀通過」, 『申報』(1948. 7. 6). 북한에서도 단독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실행에 옮겨 조선인민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北韓定期普選 決向聯合國及美國挑戰」, 『申報』(1948. 7. 12).

88) 「強權政治與韓國悲劇(社論)」, 『申報』(1948. 7. 17).

미·소의 남북한 분할점령과 정치적 군사적 대결구도가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굳어졌고, 이러한 형세 변화는 중국의 안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분단에 대하여 『申報』는 포츠담회담에서 38선을 경계삼아 미·소 양군이 남북을 분할점령하고, 혼합점령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 오류라고 보았다. 미·소의 분할점령이후 남한에서는 유엔과 미국의 지지아래 이승만·김성수 등의 친미보수정부가 탄생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도의 공산당 정부가 세워져 내정과 외교에서 소련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냉전구도에서 중간파인 김구와 김규식의 처지가 아주 비참하게 되었고, 정세를 되돌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구와 김규식 등 중간파들이 좌파로 기울게 된 것은 미군정의 실패를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申報』는 미국의 對韓政策이 進退兩難에 빠진 원인을 한국 및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군사정책에서 찾았다. 남북한의 군사역량을 비교해 볼 때, 일단 분쟁이 발생되면 남한에 주둔중인 미군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남한의 일부 정당들이 북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정의 실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⁸⁹⁾ 『申報』가 남한선거 이후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파악한 것은 국공내전에서 궁지에 몰린 국민당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절박했던 중국정부는 한국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맞이하여 『申報』는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또 다시 강조하였다. 이 기사에서 “중·한 양국은 전통적으로 手足과 같은 情을 갖고 있으며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이와 입술처럼 가깝다”라고 하면서 오랜 역사적 연고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독립운동을 동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카이로회담에서 蔣介石總統이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조력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근래의 협력관계를 부각시켰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의 백년대계를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아시아민족주의의 부흥을 예고하였다. 이 기사에서 『申報』는 중국 스스로를 아시아의 ‘만형’으로 위치 짓고, 中華民國이 분발하여 강대해지고 창의를 앞세워 아시아의 신생 국가들과 연합하여 평화와 번영을 보호한다면 동아시아의 밝은 미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⁰⁾ 이러한 對韓認識은 오래 동안 중국의 저변에 깔려있던 대외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관적인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중화의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9) 앞의 글, 『申報』(1948. 7. 17).

90) 「東亞的新氣象(社論)」, 『申報』(1948. 8. 16).

V. 맺음말

미·소 양군의 점령 3년 동안 38선은 이데올로기의 장벽이자 분단의 실체로 굳어져갔다. 특히 미·소 양측은 각자의 지배영역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이데올로기와 체제이식에 노력했다.⁹¹⁾ 이처럼 종전 이후 한반도의 첫 출발은 강대국에 의한 국토분단이었고, 남북한의 개별정부 수립은 분단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중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정세변화, 곧 냉전체제의 형성과정은 이웃 나라의 분단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현실로 다가왔다.

앞에서 살펴 본 『申報』의 한국관련 보도는 미·소 군정을 중심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반탁운동을 둘러싼 국내 정치세력의 좌우대립, 미·소 공위의 참여여부에 따른 남한정파의 분열, 한국문제의 유엔이관과 동시 철군론, 남한 총선거 및 단독정부의 수립, 북한의 공산화 등 전후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변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戰後 한국독립절차에 대하여 『申報』는 카이로회담을 구체화시킨 모스크바 3상회의의 4개국 신탁통치 결정을 찬성했지만 미·소의 한반도 독점적 분할지배에는 반대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申報』는 남한정파의 반탁운동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신탁통치가 오히려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종전직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역량이 크게 뒤떨어졌기 때문에 한국문제에 직접 개입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다자간 국제신탁의 일원으로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미·소의 분할지배와 군정통치에 관하여 『申報』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군정 자체가 민족자주정신에 위배되고, 통일독립을 지연시키며, 궁극적으로 미·소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소의 세력팽창은 남북한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중국의 동북지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申報』는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원조하는 것이 중국의 天職이라며 도의적 명분과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유대관계 등을 내세워 한국문제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특히 자국이 배제된 미·소의 군정지배에 반대하였다. 그뿐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세력들이 신탁통치의 수용여부로 분열,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지만 남북분단의 궁극적 책임은 미국과 소련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후 중국의 공식적 대한정책은 카이로회담과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인 연합국 4개국의 신탁통치를 거쳐 통일독립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력에 의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했고 오직 미국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제한된 역할만 가능할 뿐이었다. 따라서 『申報』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이 확대되자 미국의 대한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방임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북한의 통제경제와 비교하여 식민지 유산을 그대로 존속시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친일세력의 비호가 남한의 민심을 이반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91) 정병준, 앞의 글, p.482.

중국국민당 언론의 대한인식은 미군정에 의해 철저히 소외당한 임정세력의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소련군의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의 북부가 사실상 공산세력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중국의 내전이 악화되는 가운데 『申報』의 한국관련 기사는 공산당문제에 집중되었다. 당시 중국신문들의 해외기사는 대부분 美國發 언론보도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후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산당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았다. 중국 신문들은 그것을 확대 보도함으로써 냉전 구도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알려진 미국의 대한정책은 자주적 통일독립국가의 수립보다 남한에 대한 자국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구도에서 미국이 소련의 세력팽창을 막으려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해야 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했으며, 시급한 현안이 한국에서의 조속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이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전후 한국문제처리에 있어서 4개국 공동협의를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미·소 공위의 실패이후 미국에 의해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이로부터 한국독립의 우선 순위는 미국이 제안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소련의 동시철군이 서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미국의 한국독립방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후 『申報』의 관심사는 남북한의 정국동향과 미군정의 역할에 집중되었다. 일반적으로 『申報』를 비롯한 중국국민당 언론은 김구에 의해 주도된 임정세력을 근간으로 통일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남한의 정치현실은 미군정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승만과 김성수 등의 우파세력에 의해 압도되었으며, 친미반공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여기에 실망한 『申報』는 평양의 연석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고, 남한선거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으로 인식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선거가 비교적 평온하게 끝나고 곧이어 단독정부수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申報』의 회의적 시각도 바뀌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완료된 후 전통적인 한·중 관계의 긴밀성과 우호협력을 강조하면서 이승만대통령과 이범석 국무총리에 대해 우의를 표시하고 새로운 연대 발전의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승만대통령도 특사자격으로 趙炳玉을 중국에 파견하여 蔣介石總統에게 그동안 한국의 독립운동을 협조해주고 신정부를 신속히 승인해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시하였다. 여기서 조병옥은 “중국이 단시일 내에 모든 반동분자, 특히 적색분자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적색분자는 중·한 양국의 공동의 적이라고 지적했다.⁹²⁾ 이렇듯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냉전체제를 전제로 하는 한·중의 반공연대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申報』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말형’으로 위치 짓고, 아시아의 신생 국가들과 연대하여 평화와 번영을 보호한다는 동아시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군정 시기 중국국민당의 대한인식은 열악한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변용된 중화의식의 전형을 보여주

92) 「韓國特使飛抵滬 昨晚晉謁蔣總統致敬」, 『申報』, (1948. 9. 12).

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申報』

『中央日報』

『大公報』

劉金質 外篇, 『中朝中韓關係文件資料匯編(1919~1949)』 上·中·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張存武·趙中孚·胡春惠 主編,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 1~12冊, 臺北: 國史館, 1990.

천관우, 『자료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서울: 지식산업사, 2007.

2. 연구서 및 논문

김지훈, 「중일전쟁시기 『解放日報』의 한국인식」, 『史林』 제25집, 서울: 수선사학회, 2006.

박명희·이재령 외, 『근현대 전환기 중화외식의 지속과 변용』, 용인: 단국대출판부, 2008.

方漢奇, 『中國新聞事業通史』 第二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6.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1919~1945』, 上海人民出版社, 1995.

孫乘會,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東洋史學研究』 第83輯, 서울: 東洋史學會, 2003.

宋軍, 『申報의興衰』,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이시카와 쇼지·히라이 가즈오미 역음, 최덕수 옮김, 『끝나지 않은 20세기 - 동아시아역사 1894~』, 서울: 역사비평사, 2008.

이완범, 『한국해방 3년사』, 서울: 태학사, 2007.

李在鈴, 「20세기 중반 韓中關係의 理解 - 韓國獨立에 관한 中華意識의 二重性 -」, 『中國近現代史研究』 第29輯, 서울: 中國近現代史學會, 2006.

_____,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 - 『中央日報』·『新華日報』를 중심으로 -」, 『中國學報』 第56輯, 서울: 韓國中國學會, 2007.

임상범, 「중국의 남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史叢』 제67집, 서울: 고려사학회, 2008.

정병준, 「1945~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내 조직과 활동」, 『史學研究』 55·56 합집(신재홍정년 논문집), 과천: 한국사학회, 1998.

_____, 「동서냉전체제와 한국전쟁 - 한국 분단체제·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중심으로 -」, 역사학회 역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일조각, 2007.

조순승, 『한국분단사』, 서울: 형성사, 1982.

崔丞, 『近代東北亞國際關係史研究』,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1』, 서울: 오름, 1998.

胡春惠 著, 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8.

黃定天, 『東北亞國際關係史』, 黑龍江教育出版社, 1999.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I 中文要旨 I

美軍政時期(1945~1948)中國國民黨言論的對韓認識

- 以『申報』爲中心 -

李 在 鈴*

Chinese Nationalist Party Mass Media's Perception of Korea in the age of U.S
Military Government(1945~1948): Focusing on the Shen-Bao

Lee, Jae-ryoung**

这篇文章通过对终战后作为中国具有代表性的民营新闻的由国民党人士发行的『申报』中发表的相关韩国的报道进行分析,把握了在东亚秩序重组过程中中国对韩国的认识和冷战形成期的韩中关系。

战后,『申报』上刊登的韩国报道都是关于以美军政的占领政策和统治活动为中心的国内政治势力的反对运动,即刻独立和统一独立的对立以及共产党势力的扩张的内容。关于战后处理上的问题,中国没有余地能够直接介入以美苏为主导的国际协议中,只能通过美国的后援和协助起到有限的一些作用。因此,中国把在开罗会谈中根据四国协议决定的韩国独立作为基本原则,并且努力地进行贯彻。1947年末,韩国问题移交给联合国,使得美国的影响力急剧扩大。与之相反,中国方面尽管历史上和地理上都切实与韩国有着较深的关系,但却没办法积极地进行干预。

『申报』对于南北分裂和美军政三年的评价持有否定的态度。『申报』认为战后美苏最初没有对韩国进行混合占领而是采取以38线为界限进行分割占领的方式时已经导致了错误的开端。地理性的分割统治导致了政治体制的分离,造成了永久分离的结局。因此,南北韩分割问题初始责任在于美苏,韩国则被认为是冷战体制最初的牺牲品。

当然,『申报』认为南韩的政治势力就託治與否和建国方式的问题分裂成左右两派也是造成南北分割的一个重要原因。但还是主张造成南北分割的最终责任在于美国,并且引起了冷战体制的形成。尽管战后在欧洲共产势力迅速扩张,美国却仍然在东亚采取消极的应对政策,因此不可避免地导致了冷战的发生。例如,『申报』认为美国将殖民地韩国和战败国德国进行同等对待,视为美国的占领地,美军政的占领政策也右

* 檀國大學校, 文科學系, 副教授

**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傾，容許親日派得勢，引起了民心渙散，歪曲了解放政局。這樣，『申報』強烈提及美國責任論的原因是由於它認為南北分割和國共內戰有著不可分割的關係，逆向地表達出對於東亞能夠擺脫冷戰體制的期待，希望美國能夠隨之採取積極介入的方式。

期待在美軍政時期能夠成立親中國的統一獨立政府的『申報』對於韓國的認識是對於逐漸陷入分割泥淖中的韓國現實的同情，同時也是間接表達對於中國漫長的內戰狀況的深切擔憂。在這種混亂的情況下，面對大韓民國政府的成立，『申報』將中國自身定位為東亞的“兄長”，提出要与亞洲新生國家相互聯合，保護和平和繁榮，揭示出了東亞未來的景象。如此，戰後中國言論的對韓觀點與中國的悲觀現實狀況沒有關係，內部存在著以傳統的中華主義為基礎的優越意識。

【關鍵語】 申報，中國國民黨，美軍政，韓中關係，韓國獨立，信託統治，美·蘇共同委員會，冷戰體制，南韓單獨政府。

[Key Words] Shen-Bao, Chinese Nationalist Party, U.S Military Government, The Korean-Chinese Relationship, The Korean Independence, Trusteeship, A joint the U.S.-the U.S.S.R. commission, The Cold War system, The Single Government of S. Korea.